



반동 이후의 긴장: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남북한의 외교경쟁(1964~1965)*

김도민**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본고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추진되던 1964~1965년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해당 회의를 둘러싸고 벌인 외교경쟁을 분석했다. 자카르타 준비회의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초청되었고, 제네바 경제회의에서 실제로 남북한이 마주하는 등, 국제회의를 둘러싼 외교경쟁이 전개됐다. 북한은 자립경제 모델을 내세워 적극적 외교를 펼쳤으나, 남한은 신중히 접근했으며 '두 개의 한국'이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2차회의는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이 과정은 탈식민·냉전·분단·발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제3세계 국제정치의 양상을 보여준다.

주제어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제네바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 남북한 외교경쟁, 자립경제, 중소분쟁, 글로벌 사우스

I. 들어가며

2025년은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최초의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동회의)가 1955년 개최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1955년 반동회의를 기점으로 세계정치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한 신생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탈식민·탈냉전 평화를 지향했다. 이들은 1960년 전후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대거 독립함으로써 더욱 그 세를 확장했으며, 1961년에는 다수의 신생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

* 이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2020)의 4장 1절의 일부를 활용했으며, 2025년 5월 한국냉전학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광복 80년·분단 80년, 냉전의 유산과 평화들')의 2일 차 세션('반동정신과 대안적 평화레짐')에서 발표한 내용('1961~1965년 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남북한의 외교경쟁')에 기반하여 작성됐다.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2-CKD-1230004).

** knehiet@kangwon.ac.kr

된 비동맹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은 1950년대 말부터 반동회의의 주역인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 등으로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 내 중국과 소련이 갈등함으로써 양국은 아시아·아프리카를 둘러싸고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¹ 이러한 지역분쟁과 중소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1960년대 중반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고는 1964~65년 시기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준비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특히 회의에 초대된 남북한이 이 회의를 둘러싸고 펼쳤던 외교경쟁의 역사적 과정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5년의 반동회의는 1961년 창립되어 현재까지 열리고 있는 비동맹회의의 전신이자 현재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관련한 여러 국제회의의 역사적 기원으로서 여전히 소환되고 있다. 반동회의 관련 국내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다수 제출됐다(이병한, 2010; 김학재, 2015; 임예준 2015; 옥창준, 2015; 홍종욱, 2018).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사우스 관점에서 반동회의를 중요한 역사적 참조점으로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했다(김태균, 2023).

이처럼 탈냉전 이후 반동회의 관련 연구는 상당히 축적됐으나, 1960년대 초 중반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개최를 둘러싼 일들과 여기에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못했다. 유일하게 문학 연구자 장세진이 제1, 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와 남한의 인식과 대응을 국내 신문과 잡지, 그리고 문학 작품에 근거하여 밝혔다. 특히 그는 처음으로 1965년 2차회의가 좌절됐음에도 남한 정부와 지식인들이 제1차 반동회의 때보다 더 큰 관심을 보였음에 주목하고, 이를 당시 한국 민족주의와 연관하여 설명했다(장세진, 2019). 다만 선구적인 그의 연구는 자료의 한계상, 당시 박정희정부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외교적 정책을 실행했는지 밝히기 어려웠다. 나아가 2차회의에는 남북한이 모두 초청되어 치열한 외교경쟁을 전개했음

¹ 중국과 소련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또는 제3세계 국가들을 둘러싼 외교경쟁의 양상은 다음을 참고할 것. Jeremy Friedman (2015), *Shadow Cold War: The Sino-Soviet Competition for the Third World*,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에도, 북한이 어떠한 인식과 대응을 펼쳤는지 그동안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고는 1960년대 초중반의 지구적 냉전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한이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외교적 대응을 전개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196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준비를 위한 외상회의에서 남북한이 모두 2차회의 초청 대상국이 됨으로써, 그 직후 제네바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에 남북한이 모두 참석하여 대결한 역사를 처음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들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어떻게 참여했으며, 이에 대응을 하였는가? 둘째, 남북한은 각자의 외교적 정통성을 정당화하고자 국제사회에 무엇을 호소했는가? 셋째, 당시 회의를 둘러싼 국제 정세(중소분쟁, 제3세계 분열 등)는 남북한의 외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넷째, 회의의 무산 과정에서 남북한은 각각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다섯째, 냉전기 남북한이 전개한 제3세계 외교경쟁은 어떠한 역사적 함의를 가지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남한의 외무부가 생산한 외교사료와 북한의 로동신문 그리고 우드로윌슨센터가 제공하는 문서(중국과 북한 외교관의 대화 등)를 주로 활용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박정희정부의 외무부가 수집한 정보를 가능한 당대의 맥락을 고려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했다.

II.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위한 자카르타 준비회의와 남북한의 동시 초청

1960년대 초중반, 지구적 냉전의 양극화는 완화되고 있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 이후, 미국과 소련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을 체결하는 등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또한 1960년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신생국이 급증하며 냉전의 양대 진영 바깥에 서려는 흐름은 강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은 분열하는 양상을 보였

다. 즉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며 반제국주의와 식민지해방 투쟁을 내세우는 급진적인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추진하는 그룹과 인도·유고슬라비아·통일아랍공화국(UAR) 등을 중심으로 평화공존과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비교적 온건한 ‘비동맹 그룹’으로 양분되고 있었다. 남한 외무부의 정세 판단에 따르면, 1964년 제3세계는 “급진파가 아·아 회의를” 그리고 “온건파가 비동맹국회의를 각각 주름잡아 영도권” 쟁투를 펼치고 있었다.²

이러한 지구적 냉전의 상황에서, 1964년 4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신흥세력 경기대회 본부 청사에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개최를 위한 외상급 준비회의(이하 자카르타 준비회의)가 22개국 대표들의 참가하에 열렸다. 특히 “회의장 벽에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세 사람의 아세아, 아프리카 투사를 그린 커다란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로동신문, 1964/04/12). 인도네시아 국회 초청으로 자카르타를 방문 중이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자카르타 준비회의 참가국이 아님에도 회의를 참관했다(로동신문, 1964/04/07).

4월 15일, 자카르타 준비회의는 「외상회의 최종성명서」(FINAL COMMUNIQUE OF THE MEETING OF MINISTERS)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반동회의 10주년이 되는 내년(1965년) 3월 10일 아프리카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며, 주최국 결정은 아프리카통일기구(OAU)에 위임했다. 장소가 아프리카로 정해진 것은 1차회의가 아시아에서 열렸기 때문이었다. 자카르타 준비회의는 2차회의에서 다룰 임시 의제로 ‘반동원칙 평가’, ‘탈식민의 반제국·반식민 투쟁’, ‘인권’, ‘군축’, ‘경제와 문화 협력’, ‘평화공존’ 등을 선정했다(로동신문, 1964/04/17·18).³

그런데 초청 대상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말레이시아 관련 논쟁이 있었다. 인도 대표는 소련을 초청하자고 주장했으나, 중국은 “소련 대표가 출석하

² 「제2차 아아회의 소집국 기준 발표」(1964. 10.),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2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4. 4.~65. 3.)」, 외교사료관, 1996.

³ 최종 성명서는 다음에 실려 있다. 아주국 동남아아주과, 「(행정연구서) 제목: 제2차 아아회의 참석 문제」(1965. 1. 10.),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2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4. 4.~65. 3.)」, 외교사료관, 1996.

면 보이콧”하겠다고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제까지 민간 차원에서 열렸던 아시아·아프리카 관련 회의 등에서 소련 대표도 참석해 왔기 때문에, 인도의 소련 참가 주장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당시 중국이 인도의 소련 초청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던 것은 중소분쟁이 더욱 격화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1963년 9월부터 “중국은 공개서한을 통하여 소련 수정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박종철, 2015: 104). 이에 1964년 4월 7일, 소련 정부 기관지 『이즈베스차』(*Izvestia*)는 중국이 “공산주의운동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동아일보, 1964/04/08). 중국이 소련의 참가에 반대했다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가 반대하고 나섰다. 1963년 9월 16일, 영국이 ‘말레이시아연방’을 만들어내자, 이에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은 신식민주의의 변형으로 규정하고 “말레이 본토에 게릴라를 투입”하기 시작했다(경향신문, 1964/09/18). 1964년 1월,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군 지휘관들에게 말레이시아연방을 “분쇄하기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양국은 전쟁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다(로동신문, 1964/01/06). 결국, 자카르타 준비회의에서는 소련과 말레이시아 초청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련과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자카르타 준비회의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초청 대상을 확정했다. 첫째, 1955년 반동회의에 참여한 국가들, 둘째, 아프리카통일기구(OAU)의 구성국, 셋째, 외몽골·북한·남한·키프로스·쿠웨이트·서사모아·앙골라임시정부, 넷째, 기타 미독립 지역 대표 등이었다. 이로써 1955년 반동회의 때와 달리, 남북한 모두 2차회의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⁴

자카르타 준비회의 관련 소식을 북한 로동신문은 ‘선별’하여 내보냈다. 반제국주의에 앞장서는 인도네시아·중국·알제리의 주장은 자세히 소개됐으나,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었던 인도의 발언은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 4월 14일 자 로동신문 4면에는 자카르타 준비회의 소식을 크게 전하면서도 1주일 전의 네루 수상 발언을 비난하는 기사를 함께 실었다(로동신문, 1964/04/14). 4월 1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차회의 소집 결정에 대하여 “제국주의와 친구 식민주의를 반

⁴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1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2. 7.~64. 5.)』, 외교사료관 1996.

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서 달성한 새로운 성과”라고 규정하며, 북한도 “적극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로동신문에는 채택된 자카르타 「외상회의의 최종성명서」를 “「공보」”라는 제목하에 거의 그대로 실렸다. 이로써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초대됐다는 사실이 북한 인민들에게 알려졌다(로동신문, 1964/04/18).

한편, 1964년 4월 3일 남한의 외무부 아(亞)·중동(中東)과는 2차회의의 관련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미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남한의 “참여 가능성을 공언”했기 때문에, 남북한이 “동시 초청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검토 연구하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⁵ 또한 미국 국무부 동남아공산 지역 국장 그랜트는 “남북한이 같이 초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미 이 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바 있는 사실과 제2차회의 의제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사실을 참작”하여, 박정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알려졌다. 일찌감치 참가를 공표한 북한과 달리, 남한은 회의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⁶

III. 제네바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와 남북한의 동시 참석

자카르타 준비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북한은 동시 초청이 됐다. 북한은 기다리던 2차회의가 열리는 데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하며, 이미 참석을 공언하고 있었다. 반면, 자카르타 준비회의의 선언서가 발표된 지 3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남한의 외무부 장관은 “참석하라는 정식 초청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언급할 뿐이었다.⁷ 그런데 자카르타 준비회의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초청된 국가 대표들이 회의에 제출할 ‘경제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⁵ 이충동과, 「참고자료」(64. 4. 3.), 「비동맹 정상회담, 제2차. Cairo, 1964. 10. 5.~11. 전2권: V.1 기본문서」, 외교사료관, 1995.

⁶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1.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2. 7.~64. 5.)」, 외교사료관 1996,

⁷ 「장관이 보내는 발신전보」(1964. 5. 4.), 위의 자료.

무역개발회의(UNCTA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가 종료하는 직후 다시 모이기로 했었다.⁸ 그런데 5월까지 박정희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경제회의의 참석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6월 3일, 유엔무역개발회의에 참석 중인 수석대표 이한빈은 관련 초청장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히 외무부 장관에게 참가 여부 및 북한 대표가 참가하는 경우 취할 태도 등을 질의했다.⁹ 실제 이날 오후, 라이베리아와 인도네시아 대표 명의로 발송된 초청장이 도착했다.¹⁰ 6월 4일 저녁, 스위스 제네바 월슨궁전(Palais des Wilson)에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는 제네바 유엔무역개발회의에 참석 중이던 55개국과 중국이 회합했다. 이 준비회의에서는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를 무역개발회의의 직후에 열기로 결정했다. 남한의 이한빈은 회의에 참여한 중국·인도네시아·가나 등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인도·파키스탄·통일아랍공화국은 소극적이었으며,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는 태도였다고 본부에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제네바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북한의 참석이 확실히 된다고 전망했다.¹¹

6월 6일, 인도네시아와 라이베리아 대표 공동명의로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의 참가 초청장이 발송되어, 제네바 주재 남한 대표부에 도착했다.¹² 13일, 외무부 장관은 이번 경제회의에 남한 대표의 참석을 지시했다.¹³ 다만 장관은 북한 참석이 “확실”하므로, 남한의 참석이 북한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보의 사를” 회의에서 “명확히 선언”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중·소 간 “이념분쟁이” 회의에서 “표면화하는 경우”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

8 「장관이 보내는 발신전보」(1964. 5. 4.),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1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2. 7.~64. 5.)」, 외교사료관, 1996.

9 「주제네바 공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64. 6. 3.), 위의 자료.

10 다음 문건에 영문 공식 초청장이 실려 있다. 「주제네바 공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64. 6. 3.), 위의 자료.

11 「주제네바 공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64. 6. 5.),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2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4. 4.~65. 3.)」, 외교사료관, 1996.

12 참가 초청장은 다음 문건에 포함되어 있다. 「아·아 회의 참가 초청장 송부」(1964. 6.), 위의 자료.

13 동남아주과 김기수, 「(품의) 제목: 제2차 아아회의 참석」(1964. 6. 10.), 위의 자료.

을 전달했다.¹⁴ 장관 결정에 따라, 이한빈은 라이베리아 대표단 의장에게 초청 수락을 통보했다.¹⁵ 이로써 남북한은 1954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만난 지 10년 만에 다시 같은 곳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3개월간 진행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종료된 직후인 6월 16일, 제네바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가 시작됐다. 남한은 이한빈 대사를 대표로 하는 5명이, 북한은 허담 부상을 대표로 7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한빈은 본부 지시대로 “의장 앞으로 우리의 참석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서(statement)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공식 기록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한국(Republic of Korea) 대표단”과 “이북(northern part of Korea)” 몇 사람이 함께 출석했으나, 이것이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총회 결의안 195(III)에 따라 인정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확고한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절대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¹⁶ 이처럼 박정희정부는 남북한이 비록 국제회의에 동시에 참석하지만, 이것이 ‘두 개의 한국’을 용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김도민, 2023).¹⁷

첫날(16일) 회의에서는 전날(15일) 종료된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결과에 관한 각국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파키스탄 대표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채택된 ‘G-77 공동선언서(Joint Declaration of the Seventy-Seven Developing Countries)’에 관하여 설명하고, 성공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¹⁸ 또한 인도 대표는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남한과 남베트남이 새롭게 가입함으로써 77그룹이 됐으며, 이는 아시아·아프리카 후진국 간의 단결과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예라고 발언했다.¹⁹

¹⁴ 「장관이 유엔통상개발회의 대표에게 보내는 전문」(1964. 6. 13.), 위의 자료.

¹⁵ 「이한빈 대사가 라이베리아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1964. 6. 15.), 위의 자료.

¹⁶ 「(수석대표 대사 이한빈이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제목: 아·아 경제회의 참석 보고서」(1964. 6. 22.), 위의 자료.

¹⁷ 박정희정부의 두 개의 한국 문제 관련한 할슈타인 원칙의 적용과 변형 그리고 폐기의 과정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김도민(2023), “1961~1973년 박정희 정부의 대(對)중립국 외교와 할슈타인 원칙”, 『역사문제연구』 52.

¹⁸ ‘77그룹(Group of 77)’의 의장을 파키스탄이 맡고 있었다.

¹⁹ 「(수석대표 대사 이한빈이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제목: 아·아 경제회의 참석 보고서」(1964. 6.

그리고 77그룹이 아닌 중국 대표 방이(方毅, Fang Yi)의 긴 연설이 시작됐다. 그는 아시아·아프리카에서 30개 이상의 국가들이 독립했음에도 여전히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인민들의 반제국주의 연대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자신들은 평등(equality)과 호혜적인(mutual) 원칙에 입각하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1955년 반동회의 이래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협력은 상당히 성장했으며, 앞으로 열릴 2차회의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협력에 새롭고도 더 넓은 전망을 열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²⁰

이어서 북한 대표 허담이 발언했다. 그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아시아·아프리카 인민들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활시키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는 회의 개최 자체가 바로 아시아·아프리카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하여 민족해방과 자주적인 진보의 길을 다이내믹하게 걸어온 열망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북한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개최를 열렬히 환영하며,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제적 발전과 협력은 신생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은 오랜 식민통치의 유해한 유산을 물려받은 상황에서, 확고한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정치적 독립은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즉 그는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발전(자립)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으나, 이들이 부유한 천연자원을 서로 협력하여 이용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투쟁한다면 경제적 후진성(economic backwardness)을 제거하고 빠르게 번영하는 나라로 ‘전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가 바로 “조선인들의 경험”이었다. 북한이 걸어온 ‘자립적인 민족경제(independent national economy)’ 건설의 방향이 강력한 통

22.), 위의 자료.

²⁰ 「중국 대표단 단장 방이의 연설(Speech by Fang Yi, Head of Chinese Delegation)」(1964. 6. 16.), 위의 자료.

치와 독립 국가(independent state)를 건설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였다. 그는 북한 “인민들은 전쟁의 잣대미라는 극단적인 어려운 조건 하에서 재건을 진행했고 단 10년 만에 자립적인 국가경제”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후진(backward)적이고 식민·반봉건적인 북한 사회가 이제는 공업·농업국가(industrial-agricultural state)로 전변했으며, 의식주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북한의 경험에 근거하고 반동원칙들에 입각하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강력히 통합한다면, 자립적인 국가경제를 건설하고 통치 독립성(sovvereign independence)을 발전시키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상대적으로 발전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이기적인(unselfish) 경제적·기술적 원조를 이들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의존한다면 정치적·경제적 독립은 불가능할 것이었다. 특히 그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원조”와 “협력”을 외치고 있으나, 이것은 새로운 경제적 노예화의 시도라고 비난했다.²¹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발언에 대해, 남한의 이한빈은 장관에게 “중공 및 북괴의 정치성을 띤 연설에 대하여 좌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표들이 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했다.²² 북한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전후 사회주의 형제국 중국과 소련의 상당한 원조에 기반했으므로, 허담의 발언은 과장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독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 대표들에게 북한식 발전모델은 주목할 만한 이야기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남한과 달리, 북한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으며 경제발전 속도도 빨랐기 때문이다.

2일 차(17일) 회의에서, 이한빈은 먼저 유엔무역개발회의의 결과 77그룹에 남한이 새롭게 가입한 데 대하여, 특히 인도 대표의 환영사에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77그룹의 행동 통일이 “통상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아·아회의”와 “유엔의

21 「외무부상 허담의 연설(Speech by Vice-Foreign Minister HU DAM)」(1964. 6. 16.), 위의 자료.

22 「(수석대표 대사 이한빈이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제목: 아·아 경제회의의 참석 보고서」(1964. 6. 22.), 위의 자료.

테두리 내의 관계 회의에서도 계속” “유지”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밝혔다.²³ 또 한 참가국들의 발언이 종료된 이후, 공동선언문 초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때 이한빈은 초안 10항의 1절 끝에 적시된 “경제적 독립(independence)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문구와 2절의 한 문장 전체 “삭제”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한빈의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그대로 공동선언문에 담겼다.²⁴

종료된 제네바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에 대한 남북한의 평가는 극명하게 달랐다. 남한의 이한빈은 이번 회의는 “중공 등이” 참석했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의의”가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²⁵ 반면, 북한은 이번 회의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며, 이 경제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회의라며 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²⁶

IV.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개최 연기와 남북한의 대응

1. 1964년 하반기, 남북한의 적극적인 아시아·아프리카 외교

1964년 7월 17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린 아프리카 정상회의(OAU)는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²⁷ 아

²³ 「수석대표 이한빈이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64. 6. 18.), 위의 자료.

²⁴ 삭제를 요청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또한 대표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민족경제(national economics)를 발전시키고, 상호원조(mutual aid)와 협력을 강화하는 원칙과 수단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가졌다.” 「수석대표 대사 이한빈이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제목: 아·아 경제회의의 참석 보고서(1964. 6. 22.), 위의 자료.

²⁵ 「수석대표 이한빈이 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64. 6. 18.), 위의 자료.

²⁶ 「외무부상 허담의 연설(Speech by Vice-Foreign Minister HU DAM)」(1964. 6. 16.), 위의 자료.

²⁷ 외무부 정보에 따르면, 이는 알제리 스스로 제안한 것이었다고 한다. 구미국 아중동과, 「아프리카통합기구(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제1차 회의」(1964. 7. 28.), 『OAU 정상회담, 제1차. Cairo(통일아랍공화국) 1964. 7. 17.~21.』, 외교사료관, 1995.

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알제리는 1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962년 독립한 신생국이었다.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은 1954년 알제리전쟁이 선포된 이후, 치열한 무장 독립투쟁이 전개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노서경, 2017). 특히 북한은 알제리 민족해방운동에 주목하며, 1958년 알제리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 곧바로 외교적으로 승인했다(로동신문, 1958/09/24). 또한 1960년 5월, 북한 지도부는 알제리임시정부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대하여 알제리 독립투쟁에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로동신문, 1960/05/10). 나아가 1962년 에비앙협정이 체결되어 알제리가 독립하자, 즉각 북한은 외교관계를 설정했으며 1963년 5월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로동신문, 1963/05/08). 반면, 남한은 1958년 수립된 알제리 임시정부에 대하여 “침묵”(silence)했으며,²⁸ 1962년 알제리가 독립하자 미국처럼 알제리를 외교적으로 승인하는 정도에 머물렀다.²⁹ 이러한 알제리에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1964년 10월, 주최국 알제리에서 15개국이 참가하는 대사급 준비위원회가 열렸다.³⁰ 그런데 1964년 10월 22일 자 라바트 신문 보도를 통해 남한 외무부는 이번 준비위원회가 남한을 초청 대상국에서 제외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³¹ 외무부는 준비위원회 참가국인 인도와 통일아랍공화국의 총영사관 그리고 모로코 대사관 등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다. 인도는 남한이 제외됐다는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그럴 일도 없다고 했다.³² 통일아랍공화국도 “자카르타 준비회의에서 결정된 참가국은 변

28 「대통령실을 위한 메모랜드」(1958. 9. 29.), 『알제리 망명정권에 관한 건』, 외교사료관, 1994.

29 「알제리아국 승인에 관한 각의 안건」(1962. 7. 4.), 「신생독립국 승인 - 알제리」, 외교사료관, 1995.

30 제2차 아아회의의 준비위원회(대사급 상임위원회)의 15개국은 알제리·캄보디아·중국·에티오피아·기니·인도·인도네시아·이란·파키스탄·모로코·통일아랍공화국·가나·탄자니아·잠비아·말라위 등이었다. 「주카이로 총영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64. 12. 28.); 1996, 「제2차 아아회의의 소집국 기준 발표」(1964. 10.), 위의 자료.

31 「아프리카 민족-라바트 1」(1964. 10. 22.),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 (V.2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4. 4.~65. 3.)」, 외교사료관.

32 「(주뉴델리총영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제목: 제2차 아프로, 아세아회의의 예비회담」, 위의 자료.

경할 수 없”으므로, 남한은 “틀림없이 참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³³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참가 초청장을 실제로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박정희정부는 회의 참석 여부 자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참가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외무부 내에서는 참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민간급 아아회의와는 달리” 이번 2차 알제회의는 “정부급 회의”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며, 또한 “자유 우방국”과 “엄정 중립국”들이 대거 참가”하므로 이번 회의는 “공산진영의 독무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³⁴

한편,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대한 지지와 참석을 일찍부터 공언해온 북한 지도부는 관련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1964년 11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용건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통일아랍공화국·알제리·말리·기니·캄보디아를 방문했다(박태호, 1987: 20). 말리만 제외하고 모두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상설준비위원회 국가들이었다. 특히 11월 30일, 북한 대표단이 알제리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내년 “3월에 소집되는 제2차 아세아, 아프리카 회의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데 대하여 일치한 결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로동신문, 1964/12/02).³⁵ 이에 박정희정부의 외무부도 1965년 2월부터 4월까지, “거물급”이 포함된 아프리카 친선사절단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파견했다.³⁶ 이는 5·16 직후 군사정부에서 아프리카에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시기 거대 아프리카 친선사절단 파견은 모두 북한의 아프리카 침투를 저지하며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⁷ 이처럼 자카르타 준비회의에서 남북한의 동시 참가가 결정된 이후, 남북한의 아

³³ 「주카이로 총영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64. 12. 28.), 위의 자료.

³⁴ 아주국 동남아주과, 「(행정연구서) 제목: 제2차 아아회의의 참석 문제」(1965. 1. 10.), 위의 자료.

³⁵ 남한 외무부도 최용건을 단장으로 하는 “90여 명”의 거대 “친선사절단”이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준비위원회” 국가들을 “중점적으로 방문”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행정연구서) 제목: 제2차 아아회의의 참석 문제」(1965. 1. 10.),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³⁶ 구미국장 정상문, 「(협조전) 제목: 대아프리카 중동지역 외교강화 계획」(1965),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³⁷ 「친선사절단 수단 및 동부아프리카 순방, 1965. 2. 26.~4. 21.」, 외교사료관, 1996.

프리카 외교경쟁은 격화하고 있었다.

2. 초청 대상국 논란과 회의 개최의 연기

1965년 2월 8일 열린 대사급 준비위원회에서는 3월 개최 예정이던 2차회의의 6월 말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주최국 알제리 정부가 회의 준비를 위한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6월 회의 개최를 앞두고, 1964년 자카르타 준비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소련 참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중소분쟁의 골은 더욱 깊어졌으며, 양국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까지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었다.

자카르타 준비회의 직후인 1964년 4월 18일, 중국 인민일보는 초청 원칙과 관련하여 “비(非)아시아, 비아프리카 국가”도 회의에 초대하자는 인도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인민일보는 소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인도의 제안은 아시아·아프리카의 통합을 위한 회의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³⁸

5월 4일, 소련은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아시아·아프리카 관련 국가들에게 송부했다. 성명서는 먼저 소련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에 반박했다. 우선 지리적으로 소련은 유럽의 3분의 1에 속할 뿐이며, 3분의 2는 아시아에 위치한다며, 소련의 아시아 영토는 중국보다 2배 많으며 아시아 국가들과 7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소련의 피부색이 다르다며 “인종적” 차이를 문제 삼자, 소련은 중국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거짓 핑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소련은 과거 협소한 민족주의적 이익을 추구해온 중국 황제의 역사를 언급했다. 반면 소비에트연방(Soviet Union)은 여러 아시아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포함되어 다민족적(multinational)이며, 그동안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 투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국제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

³⁸ 『인민일보』의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준비회의의 성공 축하(1964. 4. 18.),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1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2. 7.~64. 5.)』, 외교사료관, 1996.

실을 강조했다. 이처럼 소련은 아시아의 가장 큰 국가들 중 하나로서 이번 회의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련국들에게 자신의 참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³⁹

중국과 국경분쟁을 치른 인도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련 참가를 지지하며 중국과 격렬하게 대립했다. 인도는 소련 초청을 실현하기 위해, 소련과 적대적인 남한 정부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1965년 1월 13일, 인도 외무성 관료는 뉴델리 주재 남한 영사에게 소련과 “관계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초청”과 관련하여, 그동안 민간 차원의 아시아·아프리카의 국제적인 회의와 행사에 소련이 빠짐없이 초청됐으며, 특히 중국과 북한이 “소련 초청을 반대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련 초청문제 자체에 대하여는 지지하여 주기를” 요청했다.⁴⁰ 5월 4일에도 인도 정부는 다시 한번 소련 초청 지지를 요청했다. 일단 뉴델리 주재 임병직 외교관은 “아직 어떠한 본부의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본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다.⁴¹ 14일, 외무부 장관은 임병직에게 “소련 초청문제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마시고” 다시 “문의”를 받으면 “이에 적극 반대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라고 지시했다.⁴²

이처럼 1965년 초, 지구적 냉전은 미국의 참전으로 베트남전쟁을 둘러싸고 적대적인 진영 대립은 격화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소련 참석을 둘러싸고 같은 사회주의 진영의 중국과 북한은 반대하고, 인도와 관계를 고려하여 남한은 적극 반대하지 못하는 ‘기묘한’ 형국이 펼쳐졌다.

1965년 6월 말로 한 차례 연기된 2차회의는 개최 한 달을 앞둔 5월 시점에,

³⁹ 「아프리카-아시아회의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소련의 성명」(1964. 5. 4.), 위의 자료.

⁴⁰ 「(주뉴델리 총영사 사무취급 대사 임병직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제목: 제2차 아아회의」(1965. 1. 15.),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2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4. 4.~65. 3.)」, 외교사료관, 1996.

⁴¹ 「(주뉴델리 총영사 사무취급 대사 임병직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제목: 제2차 아아회의」(1965. 5. 7.),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3 회의개최준비 및 참석교섭 상황보고 1965. 4.~5.)」, 외교사료관, 1996.

⁴² 「(외무부장관이 주뉴델리총영사에게 보내는 전문의 기안) 제목: 제2차 아아회의」(1965. 5.), 위의 자료.

남한 외무부는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왜냐하면 “온건파와 과격파의 대립이 더욱 심해”졌으며, “비동맹국 회의라는 유사 기구”가 탄생하여, “아아회의의 특이한 존재 이유가 희박”해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시기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오던 인도네시아는 유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인 가네포(Games of the New Emerging Forces: GANEFO)를 창설하고자 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이전보다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도외시하고” 있었다.⁴³ 반면, 인도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 움직임에 반대하며, 유엔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었다. 동시에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고 있었다. 인도는 뉴델리 주재 임병직 대사에게 “중공의 티베트 침략, 인도 침입, 동남아 침략 등”을 언급하며 “중공이야말로 신식민주의이고,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펼칠 계획임을 알리며, 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조를 요청할 정도였다.⁴⁴

남한 외무부는 회의 개최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했으나, 일단 초청장을 받기 위하여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알제리 정부에 밝히기로 했다. 5월 29일, 외무부장관은 영국·프랑스·모로코에 주재하는 남한 외교관들에게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30명 규모의 대표단을 제2차 아아회의에 파견”하겠다고 현지 알제리 대사관에 “통고”하라고 지시했다.⁴⁵ 그리고 다음날(30일), 외무부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비한 기본 입장과 방침들을 확정했다.⁴⁶ 먼저 회의의 참석 목표를 “자유진영 및 친서방 제국과 제휴하여 제2차 아아회의를 과도한 반식민, 반제국주의 노선으로 이끌어가려는 공산 및 친공계의 책략을 분쇄하고 제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즉 “과격 급진 노선과 온건 노선의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아제국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회의의 기조”를 이끌고자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외군철

⁴³ 「(아주국장 연하구가 각국장에게 보내는 협조전) 제목: 제2차 아아회의」(1965. 5. 18.), 3권, 183쪽.

⁴⁴ 「(주뉴델리총영사 대사 임병직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문) 제목: 제2차 아아회의」(1965. 5. 28.),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3 회의개최준비 및 참석교섭 상황보고 1965. 4.~5.)」, 외교사료관, 1996.

⁴⁵ 「외무부장관이 주영, 주불, 주모로코 대사에게 보내는 발신전보」(1965. 5. 29.), 위의 자료.

⁴⁶ 외무부, 「제2차 아·아회의의 가의제 분석과 우리의 입장」(1965. 5. 30.), 위의 자료.

수, 외세간섭 배제, 민족자결” 같은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최대한 “결의문 또는 선언문에서의 표현이 제2차 비동맹국 회의(카이로)에서와 같은 원칙론”을 넘지 않아야 했다.

특히 외무부는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2차회의에서 “공산계로부터 가장 저열한 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무부 내에서는 이미 베트남과병이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공산 측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참가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 참가를 결정한 이상, 외무부는 어떻게든 “월남 및 기타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친서방 제국의 지원을 얻어 미국의 대월남정책과 아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격렬한 반미적 선동과 책략을 저지”해야 했다.⁴⁷ 또한 국제회의에 남북한의 동시 참석은 다른 국가들에게 박정희정부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참석한 남한 대표는 “상이한 정치, 사회체제를 가진 국가 간의 평화적 공존” 같은 의제에도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 ‘두 개의 한국’ 및 ‘평화공존’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공산국가와의 공존”을 인정(認定)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⁴⁸

이처럼 5월 말, 박정희정부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참석을 결정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6월이 되어서도, 공식 초청장은 오지 않고 있었다. 이에 6월 4일, 외무부는 어떠한 외교적 관계도 없는 알제리 현지에 외교관을 급파하여 외무성 의전 차장에게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초청장의 조속한 발급을” 요청했다.⁴⁹ 남한 외무부가 초청장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6월 6일 알제리 벤벨라 대통령 특사와 그 일행이 평양을 방문했다(로동신문, 1965/06/07.). 7일, 알제리 특사단은 김일성 수상과 면담하며 벤벨라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로동신문은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모로코 주재 남한 대사관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아아회의 준비와 진행 상황을 알리며” “방문국 정부의 견해와 제의를 청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로동

⁴⁷ 외무부 「제2차 아아회의의 가의제분석과 우리의 입장(제1차 시안)」(1965. 5. 30.), 위의 자료.

⁴⁸ 외무부, 「제2차 아아회의」(1965.05.26.), 위의 자료.

⁴⁹ 「신, 정대사가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6. 4.),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 (V.4 알제리정변 발발 및 회의개최연기, 1965. 6.-7.)』, 외교사료관, 1996.

신문, 1965/06/08).⁵⁰

6월 4일, 알제리에서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개최를 위한 7차 상임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로동신문, 1965/06/11).⁵¹ 작년 4월 자카르타 회의 이후 “새로운 중요한 요소가 어떤 국가에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논의됐는데, 그 대상은 바로 남베트남과 남한이었다. 인도 대표는 자카르타 회의 결정대로 남한의 초청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맹렬히 반대했다고 한다. 결국 이 문제는 정상들이 모이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직전에 열기로 한 외상회의에 일임됐다.⁵²

6월 초, 북한 로동신문은 2차회의의 연기 원인이었던 알제리 건물이 6월 12일이면 완공되리라는 소식을 전하며 회의 개최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로동신문, 1965/06/07). 그런데 로동신문은 6월 4일 열렸던 7차 준비위원회 회의 소식도 자세히 전하면서도, 이때 논란이 됐던 초청 대상국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로동신문, 1965/06/11). 6월 17일 오전, 북한의 박성철 외무상이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직전에 열리는 외상회의 참석 차 평양을 떠났다. 18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 도착한 박성철은, 회의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훌륭한 결과란 “회의가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신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 기치 밑에 단결과 호상 협조의 정신을 발양”하는 것을 의미했다(로동신문, 1965/06/18·22).

그런데 다음날(19일), 알제리에서는 국방장관 부메디엔느(Houari Boumedienne)가 주도하는 군사정변으로 벤벨라 대통령이 축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새로운 정권은 예정된 아시아·아프리카 외상회의(24일) 및 정상회의(29일)를 개최하겠

⁵⁰ 「주모록코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6. 3.),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⁵¹ 「주모록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6. 5.),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6월 6일과 9일 자 알제발 AFP보도와 6월 9일 자 워싱턴 포스트도 동일하게 보도했다. 「주모록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6. 6.); 「주미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6. 9.); 「주비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보」, 외교사료관, 위의 자료.

⁵² 「뉴델리공관이 서울 외무부에 보내는 전보」(1965. 6. 11.); 「주영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6. 11.), 위의 자료. 남한 중앙정보부의 정보에 따르면, 알제리혁명 이후인 1965년 6월 30일 부메디엔느 대령은 헌병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한국은 월남에 파병했기 때문에 제2차 아아회의에 초청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모록코대사 신현준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7. 15.), 위의 자료.

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인도네시아·북베트남·북한 등은 동의했으나, 인도·파키스탄·실론·나이지리아·가나·우간다·케냐·잠비아·시에라레온·사이프러스·라이베리아·터키·일본 등이 회의 연기를 주장했다(로동신문, 1965/06/22).⁵³ 결국 26일 열린 준비위원회에서 통일아랍공화국의 나세르와 파키스탄의 사스트리가 연기를 요청하고 이에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동의함으로써,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11월 5일로, 외상회의는 그 직전인 10월 28일로 다시 한 번 연기됐다.⁵⁴ 이처럼 재차 연기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대하여, 남한 외무부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서 베트남 문제로 미국을 공격하려 했던 중국 외교가 참패한 것이자,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취약한 결속력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의 한 언론은 “제3세계의 서정적인 환상은 이미 지난날의 것이 되고 말았다”고 논평했다.⁵⁵

남한 외무부는 재차 연기된 회의의 개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첫째, 주최국 알제리는 현재 정변의 여파로 테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둘째, 이번 회의 연기를 계기로 아시아·아프리카 그룹 내 ‘과격파’와 ‘온건파’의 분열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셋째, 10월 말이라는 시점의 문제도 있었다. 9월에는 제20차 유엔총회가 열리며 그리고 10월에는 제3차 아프리카통일기구(OAU)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대표들이 다시 알제리에 모이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⁵⁶

⁵³ 「주영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6. 23.),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⁵⁴ 남한 외무부는 중국은 준비위원회의 공동선언문에 “제국주의자들의 책략” 때문에 연기됐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으나, 인도·모로코·에티오피아·실론 등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나, 관련 국가들의 외교문서를 교차 검토해야 당시 정확한 논의 과정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주모로코 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6. 27.); 「주불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6. 28.); 「주독대사가 장관에게 전보」(1965. 6. 28.), 위의 자료. 다음 문건에 상임준비위원회의 선언문(Communique)이 실려 있다. 「주미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전보」(1965. 6. 28.), 위의 자료.

⁵⁵ 「주제네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7. 2.); 「주미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7. 7.); 「주제네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7. 8.),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⁵⁶ 또한 외무부는 10월 말이면 베트남의 우기가 끝나는 시기로 “베트남의 공세가 둔화”하여 베트남 전선이 안정화 될 것이며, 이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미국을 공격하고자 하는 중국의 회의 개최 의지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주국장 연하구, 「제2차 아아회의에 관한 보고(국가안전보장회의의용)」(1965. 7. 13.), 위의 자료; 「주카이로총영사 강훈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보」 제목: 제2차 아아회의에 관한 정보(1965. 8. 9.),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

3. 회의의 무기한 연기 결정과 남북한의 반응

회의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박정희정부는 곧 열리는 제20차 유엔 총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한의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참석 문제와 관련한 지침을 확정했다. 특히 외무부는 현지 외교관들에게 작년 자카르타 준비회의에서 남한이 피초청국으로 확정된 사실을 강조하며, 이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 주최국 알제리와 준비위원회가 남한의 베트남파병을 이유로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부각하고자 했다. 즉 아시아·아프리카회의라는 국제회의에 유엔에 의해 유일 합법성을 인정받은 남한이 ‘불(不)초청’되고, 유엔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법하게 조직된 북한 괴뢰정권이” 초청되었음을 강조하는 논리였다.⁵⁷

한편, 북한 지도부는 알제리의 새로운 부메디엔느 정부에게 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회의가 예정대로 열리기를 희망했다. 남한 외무부가 입수한 8월 25일 자 알제리 정부기관지 무자히드(el moudjahid)에 따르면, 김일성 수상은 알제리 혁명위원회 의장 부메디엔느에게 “제2차 아프리카-아시아 회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족들의 결속과 전투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⁵⁸ 그런데 회의 개최를 추진하던 중국의 입장이 변화했다. 9월 29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의 외상은 “미제국주의”를 비난할 수 없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개최보다는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림이 유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⁵⁹ 미국 국무부 국장은 중국의 발언 이후 “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될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⁶⁰

중국의 입장 발표 다음날(30일),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개최에 주도적이던 인

차. 전6권 (V.5 회의개최연기 및 아국초정문제, 1965. 8.-11.), 외교사료관, 1996.

⁵⁷ 「(아주국장 연화구가 방교국장에게 보내는 협조전) 제목: 자료제공 요청」(1965. 8. 2.),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⁵⁸ 「주모로코대사 신현준이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9. 2.),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⁵⁹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9. 30.),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⁶⁰ 「주미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9. 30.), 위의 자료.

도네시아에서 군사정변이 발생했다. 앞선 알제리에서의 군사정변과 달리, 이번 정변은 수하르토 장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군부가 기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급진적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대외정책들(유엔 탈퇴하고,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하는 것과, 북한·중국과 협력을 통한 아시아 반제국주의 노선 강화하는 것 등)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조선일보, 1965/10/02). 이로써 1964년 10월 초, 반제·반식민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며 회의 개최를 주도해온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추동력은 거의 사라졌다.

10월 11일, 중국 외무부상 차오관화(Chao Guanhua, 乔冠华)는 회의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사실을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 박세창에게 알렸다. 차오관화는 무기한 연기 결정의 이유로, 첫째 유엔사무총장의 우탄트(U Thant)가 참석하는 것, 둘째 소련 참가에 반대해왔던 나세르가 반대하지 않겠다며 우경화됐으며, 셋째 인도네시아가 정변으로 혼란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⁶¹

10월 19일, 중국의 요청으로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상임준비위원회가 알제리에서 다시 열렸다. 중국은 2차회의를 연기하자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 연기를 함께 기초한 캄보디아와 파키스탄·탄자니아·기니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그동안 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었던 인도가 갑자기 회의 연기에 반대하며 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인도의 개최 주장에 알제리·이란·가나·인도네시아·모로코·에티오피아·통일아랍공화국 등이 지지했다. 인도와 알제리는 회의 연기 여부 자체는 이번 대사급 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외상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⁶² 22일,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는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참가 대상국들에게 회의 연기에 관한 공식 입장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10월 25일 열린 상임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알제리는 인도·인도네시아와 함께 예정대로 10월 28일 외상회의를 열겠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전개됐는데, 준비위원회 의장국 자격으로 알제리는 외상회의 개최를 결정했다(로동신

⁶¹ 「차오관화(喬觀華)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박세창(朴世昌) 주중 북한 대사의 대화록」(1965. 10. 11.), 월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8773>).

⁶² 「주모로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10. 16.); 「주모로코대사가 외무부장관에서 보내는 전보」(1965. 10. 21.),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문, 1965/10/28).⁶³ 이처럼 그동안 회의 개최에 적극적인 중국과 소극적인 인도의 대립이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로 바뀐 것이었다. 이는 인도가 “개최를 원해서 이기보다도 아아회의가 중공에 의하여 개최될 수 없었다는 비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⁶⁴

알제리가 외상회의를 결정해버리자, 곧바로(26일) 중국은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날(27일), 북한 지도부도 중국이 반대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일부 나라들만”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반제 반식민주의 공동투쟁”의 “단결을” 약화할 뿐이라며 불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회의를 무기한 연기 주장하며 언급했던 이유와 동일했다(로동신문, 1965/10/28).

알제리가 공표한 28일 외상회의는 다시 연기되어, 10월 30일에야 열릴 수 있었다. 45개국과 앙골라임시정부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17개국이 불참했다. 31일 오전에 열린 외상회의에서, 참가국 문제를 토의하자는 인도 주장과 회의 연기 문제를 토의하자는 알제리·파키스탄·인도네시아의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같은 날 저녁 회의에서, 알제리 의장은 회의를 연기하는 결의안을 제시하고 이를 낭독하며,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⁶⁵ 이에 인도·일본·튀니지·모로코 등은 유보를 표명했으나, 11월 2일 열린 회의에서 연기결의안이 담긴 최종 결의안(FINAL RESOLUTION AS ADOPTED ON 2 NOVEMBER 1965)이 발표됐다. 결의안 내용은 첫째,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알제리에서 차후에 개최하기로 연기

⁶³ 「저우언라이(Zhou Enlai) 총리와 천이(Chen Yi) 부총리, 박성철 외무상의 두 번째 회담의 기록」(1965. 11. 11.), 월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8693>).

⁶⁴ 「주일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10. 19.) 외교사료관, 앞의 자료.

⁶⁵ 「주모로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10.29.); 「국련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11.03.), 위의 자료. 불참을 선언한 중국은 “쏘련이 참석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3개월 후에 아아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을 수락한다”는 메시지를 알제리 정부에 보냈다. 외상회의에서 인도는 소련·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참석을, 일본은 남한의 참석을 제의하고 나섰다. 일본이 남한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이유는, 이 시기 일본의 아시아·아프리카 관련 외교정책의 맥락을 확인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965년 한일협정이 타결됐기 때문에, 이 시기 한일 간의 외교관계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외교에서도 일정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모로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10. 31.), 5권 273쪽; 「주모로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11.01.); 「(긴급)주모로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11. 1.), 위의 자료.

하며 둘째, 상임준비위원회는 2차회의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부여받으며 셋째, 향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⁶⁶ 형식적으로 알제리에서 향후 열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으나, 실질적으로 1964년 열린 자카르타 외상회의에서부터 본격화한 2차회의 개최 문제는, 1965년 두 차례 연기 끝에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이었다.

공식적으로 북한 지도부도 중국과 동일하게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무산의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의 분열 책동이라는 ‘외부’에서 찾았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는 무산의 원인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에도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양측이 나눈 다음의 긴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⁶⁷

11월 11일, 중국 베이징의 다오위타이 국빈관(钓鱼台国宾馆, Diaoyutai State Guest House)에서 중국의 저우언라이 수상과 부수상 진의는 북한의 박성철 외무상과 중국 주재 박세창 대사를 만났다. 먼저 진의는 중국을 지지하던 나세르가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원조를 약속받고서는 입장을 변경한 사실을 언급하며 비난했다. 이에 박성철은 동의하며, 통일아랍공화국·알제리·말리 등도 미국의 경제지원을 바라며 ‘미제국주의’를 강하게 비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관련하여 진의는 지난 9월 알제리 외무부 장관인 부테플리카(Bouteflika)를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다. 부테플리카는 “솔직히 아프리카 나라들의 문제는 반제국주의나 반식민주의가 아니라 빵(bread)이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자, 진의는 중국·소련·미국 누구든 빵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빵을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진의는 북한 측 인사들에게 자신이 말리·기니·통일아랍공화국·시리아·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수단 등 중동 및 아프리카를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들 나라들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행정비용이 30퍼센트가 넘을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며, 나아가 자동차와 가솔린과 관련한 과소비가 정말 끔찍할

⁶⁶ 「(긴급)주모록코대사가 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11. 1.); 「주일대사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전보」(1965. 11. 12.); 「1965년 11월 2일 채택된 최종 결의안(FINAL RESOLUTION AS ADOPTED ON 2 NOVEMBER 1965)」, 위의 자료.

⁶⁷ 「저우언라이(Zhou Enlai) 총리와 천이(Chen Yi) 부총리, 박성철 외무상의 두 번째 회담의 기록」(1965. 11. 11.), 월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앞의 자료.

정도였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북한의 리주연 부수상도 기니에서는 마실 물을 프랑스에서 구매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진의는 기니에서는 일반 관료들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장관들만 자동차가 있을 뿐 이하 차관이나 국장들은 모두 버스를 탄다며 비난에 가세했다. 북한의 외무상 박성철은 북한 관료들 모두 11번(No. '11')을 탄다며,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음을 강조했다.⁶⁸ 결국 양국 인사들 모두 회의 개최 실패의 원인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외세 의존성과 과소비·부패에서 찾았다.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철은 현재 상황을 타개할 어떤 지침이나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의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 같은 집단적인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보다는 양자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해 공산당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동의를 표하면서도, 박성철은 그렇다면 앞으로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어떠한 조건이 마련되어야만 열릴 수 있는지 물었다. 진의는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즉 반미(反美) 조건이 무르익어야 한다. 둘째, 가장 큰 장애물은 남한·남베트남·말레이시아 같은 제국주의의 '괴뢰'들이며, 이들과 함께하는 회의 개최는 불가능하다. 셋째, 주최국 알제리는 유엔사무총장 우탄트 초대는 철회해야 한다. 당시 중국은 우탄트를 "미국의 앞잡이"로 간주했다(조선일보, 1965/10/28). 넷째, 소련은 유럽 국가이므로 회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차 박성철은 반미(反美)의 구체적인 기준, 즉 미국을 반대하는 국가가 60개 이상이면 회의가 열릴 수 있는지 되물으며 어떻게든 빨리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다시 열리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진의는 조건이 언제 무르익을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회의 개최 시기는 매우 빠를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모호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이처럼 향후 반제국주의 투쟁 방향에서 북한은 일부 국가들만이라도 참여하는 아시아·아프리카 주도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자며 '적극성'을 보였으나, 중국은 사태를 관망하자며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양측은 반제국주의 투쟁

⁶⁸ 영어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In Korea we all take the No. '11'(meaning to use one's two legs to walk)"

노선을 둘러싸고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V. 나가며

본고는 1964년에 열린 자카르타 외상회의에서 남북한이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초청 대상이 되었다가, 1965년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최종 결렬되는 그 역사적 과정과 이를 둘러싼 남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내용을 남북한 외교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항목	북한	남한
기본 전략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를 통해 국제 정통성 확보 및 반제 연대 주도	‘두 개의 한국’ 인식 방지 및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등장 차단
회의 관련 태도	적극 지지 및 조기 참여 공언	참여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
외교 노선	자립경제론, 반제·반식민주의 강조, 중국·인도네시아 등과 연대	유엔 결의를 근거로 유일 합법성 주장, 서방 우방국들과 연대
소련 초청 문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지지	인도의 요청을 고려하여 ‘반대는 하지 않음’

본고에서 제기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관련하여 상이한 인식과 대응을 전개했다. 북한은 회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자카르타 준비회의와 제네바 경제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남한은 회의에 대한 참여 여부에 신중을 기하며 소극적이었으며 제한된 대응을 유지했다. 이는 양측이 회의를 바라보는 정치적 무게와 전략적 목적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둘째, 남북한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전략도 달랐다. 북한은 자립경제 모델과 반제·반식민 담론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제3세계 국가들과의 정치적·경제적 유사성과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남한은 유엔 승인에 기반한 ‘유일 합법정부론’을 고수하며, 국제회의에 북한과 동시 참석하는 것이 ‘두 개의 한국’을 용인하는 것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셋째, 당시 회의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남북한의 외교 전략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중소분쟁과 인도-중국의 갈등, 베트남전쟁의 심화는 제3세계 내부의 균열을 가속화했으며, 이러한 다극화된 냉전 구조는 회의 참여국들의 태도와 의제에 혼란을 초래했다. 북한은 중국과 보조를 맞추며 소련의 배제를 주장했고, 남한은 인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일종의 다자외교의 모습을 보였다.

넷째,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의 무산 과정에서 남북한은 다른 인식과 대응 양상을 보였다. 회의가 알제리의 군사정변과 인도네시아의 정세 변화로 무기한 연기되자, 북한은 중국의 회의 연기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소극적인 중국과 다르게, 향후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기를 원했다. 반면 남한은 회의 무산을 외교적 승리로 평가했다. 이렇게 남북한의 대응 양상은 냉전의 다층적 구조 속에서 남북한의 외교가 제약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남북한은 이 회의를 ‘국가 정통성 경쟁’의 장으로 활용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자립적 경제발전 모델과 독자노선을 제3세계에 전파하려 했으며, 남한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냉전기 제3세계 공간이 탈식민 연대의 장인 동시에, 분단국가들 사이의 치열한 정체성 투쟁의 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는 1964~1965년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추진 과정에서 남북한이 벌인 외교 경쟁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냉전기 제3세계 외교무대가 탈식민 연대의 장일 뿐 아니라 남북한의 외교경쟁이 함께 전개되는 복합적 공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의 자립경제 모델과 반제·반식민 담론 그리고 남한의 유엔에 기반한 정통성 논리가 국제회의에서 충돌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또한 국제회의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경쟁은 탈식민·냉전·분단·발전의 문제가 교차하는 과정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명확하다. 우선, 같은 시기 개최된 제2차 비동맹 정상회의(1964, 카이로)와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동회의와 비동맹회의의 참가국 다수가 중복되었으며, 두 회의 모두 제3세계 국제질서 재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양 회의의 상호관계와 그에 따른 제3세계 내부 역학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료적으로는 미국·중국·인도 등

이 생산한 자료에 기반한 실증적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박정희정부의 회의 참가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또 중국과 인도가 2차회의와 남북한 참가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전략을 가졌는지는 향후 해당국의 외교사료를 발굴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2025년 6월 15일 | 심사일: 2025년 7월 9일 | 게재확정일: 2025년 7월 30일

참고문헌

- 김도민. 2023. “1961~1973년 박정희 정부의 대(對)중립국 외교와 할슈타인 원칙.” 『역사문제연구』 52: 325-358.
- 김태균. 2023. 『반동 이후: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사회학』, 과천: 진인진.
- 김학재. 2013. “동아시아 냉전의 세 가지 평화 모델.” 『역사비평』 105: 236-279.
- _____. 2015. 『판문점체제의 기원: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파주: 후마니타스.
- 노서경. 2017. 『알제리전쟁 1954-1962: 생각하는 사람들의 식민지 항쟁』, 파주: 문학동네.
- 박종철. 2015.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와 연변 조선족.” 『민족연구』 63: 102-135.
- 박태호. 19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옥창준. 2015. “미국으로 간 “반동 정신”: 체스터 보울즈의 제3세계.” 『사회와역사』 108: 263-303.
- 이병한. 2010. “‘두 개의 중국’과 화교정책의 분기: 반둥회의(1955) 전후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5: 95-128.
- 임예준. 2015. “1955년 반둥회의가 유엔체제와 국제법질서에 미친 영향.” 『국제법평론』 42: 69-95.
- 장세진. 2013. “안티테제로서의 “반동정신(Bandung Spirit)”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1955~1965).” 『사이間SAI』 15: 135-169.
- _____. 2019. 『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1945~1972)』, 서울: 푸른역사.
- 홍종욱. 2018. “1950년대 북한의 반둥회의와 비동맹운동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61(1): 375-406.
- Friedman, Jeremy. 2015. *Shadow Cold War: The Sino-Soviet Competition for the*

Third World.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신문 자료

『로동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사료관 소장 사료(표기 순서: 『사료철명』, 공개년도)

『비동맹 정상회담, 제2차. Cairo, 1964. 10. 5.~11. 전2권: V.1 기본문서』, 1995.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1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2. 7.~64. 5.)』, 1996.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2 회의개최준비상황보고, 1964. 4.~65. 3.)』, 1996.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3 회의개최준비 및 참석교섭 상황 보고 1965. 4.~5.)』, 1996.

『아·아 회담(Afro-Asian Conference) 제2차. 전6권(V.4 알제리정변 발발 및 회의개최연기, 1965. 6.~7.)』, 1996.

우드로윌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제공

『차오관화(喬觀華)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박세창(朴世昌) 주중 북한 대사의 대화록』(1965. 10. 11.), 우드로윌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8773>)(검색일: 2025. 8. 4.).

『저우언라이(Zhou Enlai) 총리와 천이(Chen Yi) 부총리, 박성철 외무상의 두 번째 회담의 기록』(1965. 11. 11.), 우드로윌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8693>)(검색일: 2025. 8. 4.).

Abstract

Tensions after Bandung: The Second Asian-African Conference and the Inter-Korean Diplomatic Rivalry (1964–1965)

Domi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Korean diplomatic rivalry surrounding the proposed Second Asian-African Conference during the years 1964–1965. Both North and South Korea were simultaneously invited to the Jakarta Preparatory Meeting, and the two Koreas directly confronted each other at the subsequent Geneva Economic Conference, reflecting their competition for legitimacy on the international stage. North Korea actively promoted its model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while South Korea adopted a more cautious approach aimed at preventing international acceptance of a “two Koreas” framework. Although the Second Asian-African Conference was ultimately postponed indefinitely, the entire process reveals how the issues of decolonization, the Cold War,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evelopment intersected with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Third World.

Keywords | Second Asian-African Conference, Geneva Asia-Africa Economic Conference, Inter-Korean Diplomatic Rivalry, Self-Reliant Economy, Sino-Soviet Split, Global South

